

| 각국의 사회적 대화 현황 |

유럽 주요국의 근로생활 동향(2017년 4분기): 독일, 영국,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

손옥이 전문위원

이 글은 Eurofound에서 2018년 1월에 발간한 'Latest working life developments-Q4: Austria, France, Germany, and United Kingdom' 보고서를 번역, 요약한 글입니다.

■ 독일

• 경기호조

- '17년 3/4분기 경제상황은 안정화: GDP는 지속 증가(전분기 대비 0.8% 인상), '17년 11월 실업률은 5.3%(최저기록), '17년 단체교섭을 통해 2~3% 임금 인상 등

• 단체교섭합의

- 1) 건설: 2단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합의

* 최저임금1(독일 동부와 서부 저숙련 일자리 노동자): '18년 1월 1일부터 11.30~11.75유로로 인상, '19년 3월 1일부터는 11.75~12.20유로로 인상

** 최저임금2(독일 서부 숙련 노동자만 해당): '18년 1월 1일부터 14.70~14.95유로로 인상, '19년 3월 1일부터는 14.95~15.20유로로 인상

- 2) 자동차: 금속 및 전자업계 사용자 조합, IG Metall(독일 최대금속노조)은 신규 단체교

섭 시스템에 합의

* '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임금 프레임워크 및 현대화된 임금 시스템 도입 예정

** 사회적 파트너는 IG Metall이 합의한 300개 이상의 기업별교섭을 대체할 새롭고 현대화된 부문별 교섭 방안을 기대

3) 금융: 도이치 포스트뱅크 AG와 연합서비스노조는 3단계 임금인상에 합의

* '17년 4월 1일 1.7%, '18년 1월 1일 0.9%, '19년 1월 1일 2.3% 인상

** 우체국은행과 도이치은행이 '18년부터 도이치 포스트 뱅크 AG로 인수, 사회적 파트너는 '21년 6월 30일까지 약 18,000명의 고용보장에 동의

• 금속산업의 단체교섭

- IG Metall은 6% 임금인상, 2년간 주당 28시간의 근로시간 단축, 향후 전일제 근무 복귀 권한 부여 등 제안
- 이에 금속사용자연맹은 IG Metall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일정 시간 틀 내에서 주당 근로 시간 조정 가능성을 제안 했으나 금속노조는 거절
- '17년 12월, 금속사용자연맹은 2% 임금인상과 200유로의 일시금 지급을 제안
- IG Metall은 '18년 1월부터 파업선언(3.9백만 금속산업의 노동자에게 영향)

• 향후 훈련의 중요성

- '17년 10월, 독일노조연합 포함 30개 시민사회조직은 정치권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요청
 - * 독일의 전체적인 교육시스템(유치원, 학교, 대학, 취업 후 훈련을 포함) 증진의 필요성 제안
- 훈련 관련 독일 경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, '16년 기업의 평균 훈련투자 시간은 17.3시간, 비용은 330억 유로

■ 영국

• 브렉시트(Brexit) 이후 고용권에 대한 염려

- EU탈퇴 법안이 '17년 11월 하원에서 통과

* EU탈퇴 법안(European Union Withdrawal Law)은 EU법규의 영국 내의 직접적용을 규정한 1972년 유럽 공동체법

(European Communities Act)폐지와 영국의 EU탈퇴 이후 기존에 적용되던 EU법을 영국법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포함

- 노동당과 노조는 고용과 평등법 등 EU내에서 파생된 노동자의 권리는 1차 입법과 논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음을 주장
- 하지만 정부는 하위입법으로 상위법을 수정할 수 있는 헨리8세 조항(Henry VIII)을 주장

* 헨리8세 조항: 의회에서 모법을 만들 때 특정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절차 없이 내각에서 수정 가능

• 국민보건서비스(NHS) 종사자 일부에 대한 임금인상 상한액 제한 폐지

- '13년 이후, 공공분야 임금인상 상한액은 1%로 제한, 간호사, 조산사, 응급구조사에 한해 1%의 인상 상한액 적용 폐지
- 국민보건서비스(NHS)의 효율성 증진, 채용의 정당성,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는 정책에는 추가적 재정지원 예정
-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의 세부내용과 시기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

• 실업·고용·임금 동향('17년 8~10월)

- 16~64세 고용률은 75.1%로 전년 동기(74.4%)대비 상승
- 16~64세 비경제활동인구는 21.5%로 8.86백만 명
- 실업률은 4.3%로 1.43백만 명
- 전년대비 평균 주급은 보너스를 포함하여 0.2%하락

• 최저임금위반기업을 위한 강력한 제재 요구

- 기업, 에너지 및 산업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260개 기업 리스트를 공개, 노동자 16,000명에 대한 미지급분 지불 요청
- 영국일반노조(GMB)는 공개된 위반기업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, 정부의 명단공개(naming and shaming)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면서 형사기소 주장

■ 오스트리아

• 총선이후 새 연방정부의 내각구성

- '17년 10월 15일 총선, 국민당 제바스티안 쿠르츠(Sebastian Kurz)가 총리로 임명, 우

파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각각 31.5%, 26.9% 득표율로 1,2당 차지

• **사회 및 노동시장 정책 개혁**

- 다음 입법에 반영될 노동 및 사회 정책 분야의 주요변경내용

- 1) 노동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, 주당 최대 60시간이나 직장협의회를 통해 합의 가능
- 2) 실업급여, 복지급여, 복지접근권 관련 지출 삭감 계획
- 3) 특정 회사를 대표하는 구조의 젊은 노동자 협의회(Young Workers' Council)를 폐지, 협의회 가입 연령은 기존 18세까지에서 16세까지로 제한

• **단체교섭**

- 전통적으로 매년 임금교섭은 영향력이 큰 금속부분에서 시작

* 금속노조는 지난 5년간 6개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교섭, 부문별 186,000명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적용해옴

- 직장협의회, 노동자회의, 산업적 조치를 위한 사전 결정을 거친 후 합의 도출

- 금속산업의 경우 최저임금은 3%인상 된 1,848.08유로(해당년도 물가상승률은 1.9%)

- 타 분야의 임금협약이 뒤따랐으며, 일반적으로 금속산업의 임금협약을 하회

* 공공분야(2.33%), 소매(2.35~2.6%), 텔레커뮤니케이션(2.60%), 버스기사(2.65%), 경비 및 화물운송(2.70%), 시설관리(2.75%), 유치원 보조교사(3%)

■ **프랑스**

• **노동법 개혁 1단계 완료**

- 정부는 노동 개혁 이행법령 채택

* 법령 제2017-1386(17.12.29):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, 협의기구는 선출된 노동자로 구성된 단일 기구인 '사회경제위원회'로 통합하도록 명시

- 단일 협의기구를 통한 협의는 사회적 관계와 단체협약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전통과는 대조적

- 전체 개혁을 반대했던 노조가 반대여론 결집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큰 반대 없이 개혁추진

• 노동법 개혁 2단계 시작

- '17년 10월 마카롱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 2단계 착수 관련 회의를 함께 개최
- '17년 10월 정부는 '18년 하반기 전에 견습생, 직업교육, 실업보험 개편 법안 도입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발표
- '17년 11월 정부, 지방당국, 사회적 파트너 대표 간 견습생에 대한 협의 시작
- 지역 대표는 견습생이 산업부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중단
- '18년 1월 25일 협의결과 보고서 발간 예정
- 사회적 파트너는 직업 훈련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(실업자와 지속된 일자리 종사자 포함)에게 훈련 제공을 목표로 직업훈련에 관한 협상 시작
- 실업보험 계획 담당 사회적 파트너는 기존 실업보험('17년 10월 1일부터 '20년 9월 30일 까지의 기간)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룬 지 단 6개월 만에 정부의 새 협상 요청에 동의
- '17년 12월 사회적 파트너는 정부가 제안하는 4가지 개혁분야에 대한 다음의 안내서를 받음
 - 1) 자영업자와 퇴직자에게 실업보험의 확대
 - 2) 고용불안정에 맞서는 캠페인, 보너스 할증 시스템으로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무기계약을 맺도록 독려
 - 3) 실업자들의 실제구직활동 밀착 모니터링
 - 4) 실업보험의 거버넌스
- '18년 2월 15일 협상예정

• 퇴직, 사회보호 및 재정 참여

- 사회적 파트너는 2개의 강제보충 연금제도를 '19년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 하는데 합의
 - * AGIRC:관리직 대상 보충 연금제도, ARRCO:모든 노동자 대상 보충 연금제도
 - ** cf)프랑스 공적연금체계는 기초제도, 강제보충제도, 추가제도로 구성
- '17년 11월 근무조건과 관련,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에 관한 사회적 보호 증대를 요구하는 보고서 발간
-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 재정 참여 개혁 협상 시작
 - *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더 많은 노동자와 나누기 위한 목적
- 노동장관은 노조와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서 제출 요청
- Jean Paul Delevoye는 연금 시스템의 주요 개혁 착수와 연금 개혁을 위한 장관으로 임명